양정례 모녀 소환…공천 대가 돈거래 조사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

서청원 대표 추징금 납부 경위도 파악 중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23일 양정례 당선자 모녀를 불러 조사했다.

양 당선자와 모친 김순애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검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가 취재진을 따돌렸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친박연대의 당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서청원 대표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 김노식 당선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회계 책임자인 김모 국장, 비례대표 3번이자 공천심사위원이던 김노식 당선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친박연대가 양 당선자로부터 15억5천만원, 김 당선자로부터 15억원 등 모두 30억여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당 계좌로 입금받아 신문, TV 광고료 등으로 쓴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를 상대로 특별당비 1억원 외에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이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빌려준 돈인지, 선거비용 지원의 대가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가 박사모 여성회장으로 잘못 알려지고 선관위에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학력을 기재한 경위 등도 조사해 이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했던 김 당선자를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했다.

김 당선자는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당에 빌려준) 15억원은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에 "회계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서 대표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으로 부과받은 추징금 12억원 중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잔금 2억원을 최근 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서 대표는 3월 27일 현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2억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됐다는 사실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서 대표 측은 "추징금을 낸 돈은 서 대표가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낸 것이지 양 당선자 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오늘 靑 초청 미·일 순방 결과 설명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그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후속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오는 24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갖기로 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순방결과 설명 제의에 대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靑 "정무라인 개편 논의한 바 없다"

청와대는 23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정무라인 개편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정무라인 변화에 대해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쪽 일부 인사들이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에선 그런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그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정무형 특임장관을 둬 정무라인을 보강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임장관을 둘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당의 정책조율 문제 등에 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정부 부처 '군기 잡기' 나섰나

주요 정책 엇박자…"정부 태도 문제 있다" 쓴소리

새 정부 초기 당정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졌고, 일부 당직자들은 정부의 정책 접근 방향과 시각 자체를 노골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를 상대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 당정관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총대는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멨다.

이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게 세 가지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먼저 정부의 추경편성 방침을 겨냥,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기 보다 정부의 힘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한 접근 방법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성향은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지방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같은…"이라면서 "평소 (돈)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 지역 얘기는 자주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지방정책은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루머가 나오니 걷잡을 수 없이 된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대표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 금주에도 만날 기회가 몇번 있으니 협의를 계속하려고 한다"며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부와의 관계에서 '까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강부자 내각',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으로 서민 지지층의 급격한 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3대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하며 부처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혁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 사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대책이 소위 '현지적합적'이지 못하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 어려움에 대해 대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지하철 2호선 노선 변경 논란

양혜령 의원 "편의성·접근성 고려 변경해야"

시 집행부 "속도 줄고·승차감 나빠져 불가"

23일 열린 제 16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과 집행부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 변경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양혜령 광주시의원이 신설할 2호선의 노선을 승객수요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시는 기술적 문제 등을 내세우며 노선 변경에 난색을 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하철 2호선 노선 중 중흥3거리~전대입구4거리~기상청역 구간을 중흥3거리~전대입구4거리~전남대역~기상청역 구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짧은 노선에 곡선 구간이 6곳이나 생겨 속도가 줄고 승차감도 나빠지는 등 운행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 복개(覆蓋) 도로도 포함돼 공사과정에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전남대 정문을 오가는 인구만 3만여명에 달하는데다 법학전문대학원·치과대학병원 등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용 승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전남대 앞을 지나는 곡선 형태로 변경되면 주변 역의 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요 증가는 하루에 1천400명 정도"라고 맞섰다.

시는 이날 남구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5.3㎞ 구간의 지선(枝線) 건설안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에 신규 택지지구가 조성됐고 광주대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세웠던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송재선 의원이 양동시장 복개 하천 복원 및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 요청으로 돌연 취소한 데 이어, 나종천 의원도 하계U대회 유치와 관련해 격려성 질의를 하는 등 집행부 비판·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외면, 눈총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번 감사는 카운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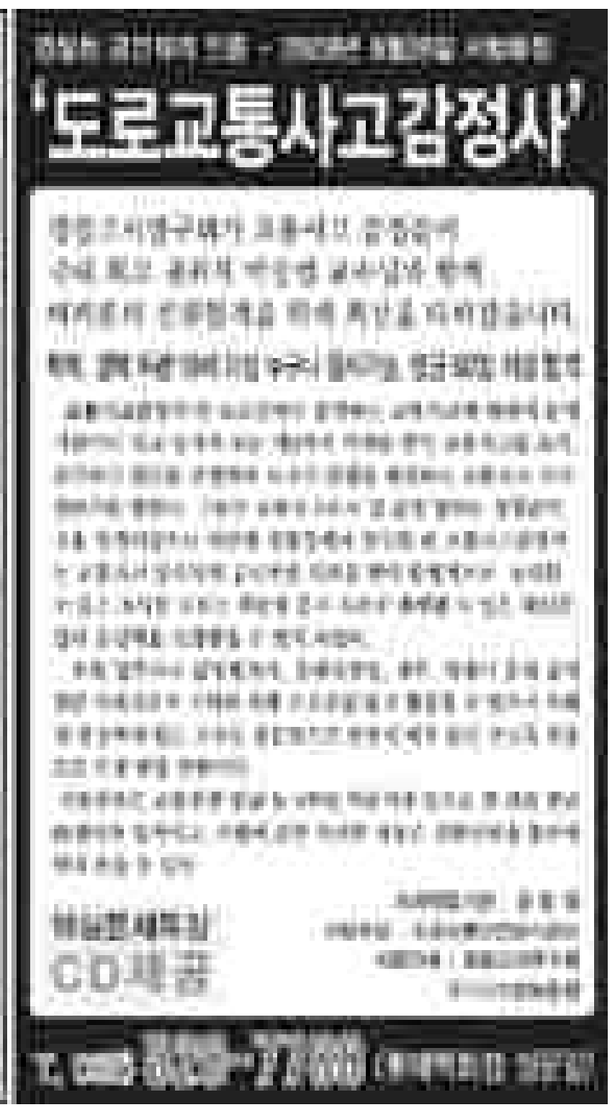
정부 광주시 합동감사 총괄 김경희 감사반장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첫 정부합동 감사를 총괄하는 김경희(여·53·사진) 정부합동 감사 반장은 "공무원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기본 업무지만 광주시에 대한 감사는 새로운 감사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에 대한 감사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 동안 실시된다.

김 감사반장은 "기업 친화를 표방하는 새정부의 방침에 맞춰 이번 감사에서 기업불편 및 지역현안 신고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신고센터는 기업가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한 뒤 해결해주는 '민원센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감사반장은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광주시의 미해결 복합민원, 지역현안을 점검한 뒤 중앙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주는 '중재감사'에 역점을 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운용되는 특별컨설팅 감사와 관련, "지적관리, 지방세 업무 등에 대한 노하우를 실무자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감사기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